



스포츠에 있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민병석** · 이승훈*** · 이호****

The Study on Policy Tasks for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in Sports

Min, Byeong-Seok · Lee, Seung-Hoon · Lee, Ho

요약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문제 중에는 인류의 생존권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이를 치유 내지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 사회정의의 실현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회정의의 실현문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스포츠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동시에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정의의 필연적 과정이 된다. 이 연구는 스포츠로 인한 각종 환경폐해의 문제와 사회부정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체육철학 연구의 학문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부정의의 유발하는 스포츠 환경정책의 문제점은 그간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과 고유성이 보존되지 못한 한계점을 들 수 있고, 스포츠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스포츠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부재, 스포츠에 있어 생태학적 정책 패러다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에 있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과제는 첫째, 녹색성장 정책이념의 구현 둘째, 환경과 인권을 결합한 스포츠 정책 구현 셋째,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탈 권력화와 탈 구조화,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절대적 이익 반영 정책이 요구된다.

※ 주제어 : 환경정의, 환경부정의, 사회정의, 환경갈등, 환경정책

Abstract

Mankind has been faced with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at currently challenges our survival being discussed.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have generated conflicts and dissonances between social classes, regions and generations. And various movement to cure and improve such environmental problems have now grown into movements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f the matter of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s seen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in effect, it boils down environmental justice. But the weaknesses of sports environmental policies of Korea are the facts that local traits and uniqueness are often ignored by uniform regul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 exists an undemocratic decision making process in sports environmental policy. Additionally, the absence of prev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 sports, and the lack of ecological policy paradigm are also urgent pending tasks. Thus, environmental policy tasks for the environmental justice are as follows the embodiment of policy ideology for green-growth, the realization of sports policy that combines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 environmental policy's break from the authority and structuralization, and the creation of policies that reflect and put at the forefront, its benefits to the local residents.

※ Key words :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injustice, social justice, environmental conflicts, environmental policy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6094).

** 제1저자, 대경대학교 경호보안과, 교수 / Daekyeung University, Dept. of Security Service, Professor

*** 공동저자,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School of Liberal Education, Professor

**** 교신저자, 해군사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Rowing2ho@hotmail.net /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Dept. of Physical Education, Professor

I. 서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문제 중에는 인류 위기 혹은 인류 공멸의 문제로 인식되는 생존권 차원의 환경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자연환경 이용과 파괴는 어쩔 수 없다는 인간중심적 가치체계와 과학기술적 진보, 그리고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벗어날 만큼 파괴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과 부작용을 치유 내지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것이 사회정의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사회정의의 실현문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정의의 실현문제로 귀착된다.

대한민국에서 환경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오면서 미국의 환경정의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대부분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환경정의를 새로운 이념 또는 활동 지침으로 수용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8년에는 ‘환경정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환경운동단체가 출범하기도 했다(박재목, 2006). 이렇게 담론 자체가 아닌 실천적 문제로서의 환경정의 문제가 널리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법이나 정책 차원에서는 미국 등 서구사회에 비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변웅과 오영석(1997: 93)은 “1972년 Mineral King으로 일컬어지는 판례에서는 무생물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며, 환경파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고소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환경보호 단체에게 ‘고소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그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민원으로부터 국가적 소임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는 그 특성상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자아실현, 그리고 성취 지향적 가치체계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써,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생태적인 것과 사회적 것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생태학 이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현대 스포츠는 그 규모나 복잡성, 영향력 등이 지대한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부실할 경우 사회적 부정의와 갈등, 그리고 분열 등 그 책임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스포츠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는 우선 이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특히, 스포츠 참여 규제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 스포츠 집단 사이의 이해문제와 갈등 조정, 정책 입안 시 고려사항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정식, 2000).

스포츠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사회적 정의실현과 동시에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서, 스포츠 정책에 있어서의 혁신적 환경정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성지은(2009)에 의하면, 최근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에 대한 범위가 과거에 비해 확장되고 서로 중첩되는 등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면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들은 친환경 혁신정책(eco-innovation),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총체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결국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의의 실현문제는 국가정책 중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스포츠 정책이 물질순환의 경제학적 중심논리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의 생존권 또한 존엄하게 여기는 생태혁신의 패러다임을 강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학술적 관심과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스포츠로 인한 각종 환경폐해의 문제와 사회부정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 정책과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체육철학 연구의 학문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II. 환경 관련 주요 사회적 담론

1.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인간은 지구상에서 생존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연생태와 필연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연생태는 인간생존의 필수조건이고 삶의 터전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될 만큼 불가분의 관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나친 이용과 종속대상으로 인식, 활용됨으로써 공존의 법칙이 와해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존의 법칙이 와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용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조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중심주의의 세계관이 깔려있다. 이학준(2002)에 의하면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은 지금껏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양철학이나 가이후 이론은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즉 인간이 자연파괴의 주범이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고, 심지어 인간을 지구라는 생명체에 기생하는 암세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란 생태계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면서 나타난 현실적인 생태적 상황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생태적 조건 사이의 모순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이상현, 2001). 이것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세계관인 것이다.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거론할 수 있다. 즉 K. Marx의 유물론적 사고에 의하면, 역사는 늘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쟁취하기 위한 경제적 욕망에 의해 추동되듯이 생존을 위한 반복적 경제활동이 환경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많은 양의 자연자원을 반복적으로 채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폐기물을 남기게 되며, 이런 경제활동이 환경의 자정(自淨)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환경문제는 종교적 신념체계에도 기원한다. 김변웅과 오영석(1997; White 1996, 재인용)은 유일신 사상을 주창하는 기독교가 서구사회에서 교리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단순히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며, 이러한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와 자연을 이용하는 개인의 윤리의식도 지나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환경갈등의 모형

인류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미래의 생존을 좌우할 초미의 과제로 인식하고 동원 가능한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생태적 조건에 현재의 생태적 조건, 즉 현실적인 생태적 조건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생태적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에 대한 생각이나 주장도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될 때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환경문제가 환경 갈등이라는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이상현, 2001).

이 환경갈등은 결국 물질적 이해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기본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데 모든 것이 경제적 보상차원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태관과 윤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환경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은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양분되어

전개되며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식과 남중웅(2002)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고질화, 악성화와 더불어 광역화라는 또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일으킨 환경문제가 다른 지역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하여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또 계층 간의 문제에 있어서 환경오염은 경제적 상류계층이 저지르고 피해는 하류계층이 보며, 환경개선도 하류계층이 부담하고 환경복구의 효과는 상류계층이 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일으킨 환경문제는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그 부담을 전후하게 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은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갈등의 본질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메커니즘과 사회구조적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각기의 환경적 가치관을 보다 유연하게 재조정하는 노력에는 소홀히 하는 한계를 지닌다.

3. 환경정의의 발달과 지향점

‘환경’과 ‘정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1980년대 ‘정의’의 최소 조건인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의 사례가 환경영역에서 발생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표로부터 환경정의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환경정책이 빈곤층 및 소수민족에게 차별적으로 부담을 부과한다는 인식을 근거로 제기되었다(한상운, 2009). 여기에서 보듯이 환경정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편타당한 평등의 원칙과 인간주의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Bryant(1988)에 의하면 환경정의는 미국에서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가 환경운동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발생하면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의의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이 안전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호작용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문화적 규범을 비롯한 가치, 규칙, 규정, 행동,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규범과 가치,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운동을 의미하고 있다.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의미는 첫째, ‘국민’을 위한 ‘환경보호’, 둘째, 환경영역에서의 평등보장, 셋째, 환경영역에서의 국민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보장을 그 내용을 한다(한상운, 2009).

환경정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권리신장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환경피해의 문제에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모든 식물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는 생태학적 이념을 추동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의는 환경법 및 정책과 관련하여 인종, 지역, 소득 등과 관계없이 환경부담(environmental burden)과 환경편익(environmental amenity)이 공평하게 구현되어 민주적 절차를 건전하게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실천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 담론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추구하는 사회정의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환경정의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의의 개념을 ‘환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 간의 문제’로 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이란 삶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희소자원인 만큼, 이를 둘러싼 접근과 배분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로 정의로운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잣대는 바로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조명래, 2000: 32). 결국 사회적으로 정의의 문제가 환경에 있어서의 정의문제로 발달되어 인간과 환경, 그리고 사회 사이의 보편타당한 가치실현의 문제로 확대된 환경정의의 문제는 1980년 이후 학문에 있어서 생태철학의 핵심 관심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III.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부정의와 정책 오류

1. 스포츠에 있어 환경부정의의 사회적 구조

환경부정의의 문제는 최근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2017년 OECD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결과 및 권고사항이 공표되었는데 심층평가 주제 중의 하나인 환경정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및 방법론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박광국·김정인, 2020). 따라서 환경부정의의 사회적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구상 환경을 보전하려는 이른바 신 환경윤리 또는 환경철학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할 자격이 있고 모든 기능을 만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평등주의의 원리에 기초한다(Naess, 1990).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 윤리는 사회문화적인 엘리트 계층에 의해 왜해되고,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엘리트 계층은 다른 계층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엘리트 계층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정치적 엘리트와 경제적 엘리트라 지적할 수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먼저, 정치 엘리트는 국가의 공권력과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고 견고하게 자리하며 환경파괴를 정당화 내지 합법화하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함으로써 스포츠에 있어서 생태학적 불평등과 소외현상, 그리고 억압과 강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정식, 2000). 특히 스포츠가 국가적 이념과 정책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과 국익을 대변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명분하에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면죄부를 받게 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 등을 무마하고 규제조치를 완화하며, 심지어 환경피해 복구의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것을 묵과함으로써 생태계의 피해를 부채질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렇듯 정치적 엘리트들은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 산업의 융성을 통한 경제성장 발달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친화적 정책, 혹은 자연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스포츠 정책은 오랫동안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참여는 특권적 지위를 점유한 정치적, 경제적 상류계층 위주로 진행되었고, 스포츠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정책과는 거리가 먼 불평등 체계를 안고 가게 되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하위계층은 오히려 불평등 구조체계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복구의 비용 또한 떠안게 되는 악순환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Goldman(1972: 67-68)은 “환경문제는 인종, 계급, 경제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류 모두의 관심사이고 인간 각자의 현실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당성 유지와 가시적 효과를 위하여 그에 따른 환경적 부작용이나 피해 현상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이를 묵살내지 간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태학적 철학과 윤리를 지니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저해하며, 절대다수의 사회변혁과 능동적인 관리전략의 제의도 무시해 버린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스포츠와 자연환경 관련한 정책에도 투영되어 심각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계층 간 위화감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경제 엘리트인 스포츠 산업가의 힘은 법적인 지원, 로비, 대중매체에의 접근 가능성이라는 특권을 가

진 그들의 우월적 경제력에 기인한다(정홍익 외, 1988). 그들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혜택을 얻어내고 각종 편익과 특권을 유도해내는 동시에, 특히 스포츠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따냄으로써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기도 한다. 이것이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부정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들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스포츠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피해는 기술로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신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환경피해는 날로 더해만 가고 있으며, 피해는 경제적 하류계층이 보고 피해복구 비용 또한 하류계층이 떠안게 됨으로써 이른바 환경에 관한 '오염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부정의의 대표적 사례로서, 각종 편익과 경제적 이익, 독점적 특권은 상류층이 즐기고 피해와 피해복구는 하류층이 떠안게 되는 불평등적 사회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스포츠 환경정책의 오류

우리나라의 스포츠 환경정책은 그간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과 고유성이 보존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 생태계와 문화적 정체성이 소멸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생활양식을 정책에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생태문화의 토대와 삶의 양식이 규격화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환경정책에 관한 한 지방의 공동체적 구조가 허술한 상황에서는 세계화의 추세에 더 큰 정책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 즉 김상현(1998: 191)은 “세계화의 대세 앞에서는 국가적 보호막마저도 강력하게 대체하게 힘들게 될 것이므로 장차 우리 사회의 각 지방은 자체적으로 취약한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와 대면해야 하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다.

또한 스포츠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들 수 있다. 스포츠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정책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정의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여 기회의 제공과 의미 있는 참여의 유도라 할 수 있다. 참여 기회의 경우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참여는 주민들이 개진한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고려되어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이상운·박지현, 2018).

다음은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부재이다. 환경정책은 사후조정정책보다는 사전예방적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이고 이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늘 사전예방적인 처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 환경정책은 그런 우선적 개념이 없이 개발과 편익, 그리고 가시적인 국민복지에 그치고 있어 환경정책의 전근대성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환경정책에 생태학적 정책 패러다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류문명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는 환경위해요인을 차단 내지 최소화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스포츠 환경정책상에 그러한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부족하다.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Milbrath(1984)의 용어를 빌자면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IV. 스포츠에 있어 환경정책 과제

1. 녹색성장 정책이념의 구현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해결책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통제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환경론적 전체주의가 등장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로 생태독재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환경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생태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회적 생태학을 제시해야 한다. 이 사회적 생태학의 이념은 인간 이외 환경 종의 생존권까지도 고려하는 환경의 공공성을 주창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생태학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최근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제창으로서,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 위원회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색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웅대한 비전을 선포하였다(정진영, 2009). 이와 같은 분위기 하에서 스포츠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이념을 담은 이른바 환경 혁신운동이 전개되면서 green olympic 등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과 건전한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즉 스포츠에 있어서 녹색성과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이념인 것이다. 이에 이징연과 김동규(2009)는 스포츠계는 녹색성장론의 경제 중심논리나 과학기술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탈피하여, 그것의 사회문화적 외연을 탐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스포츠에 있어서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이나 지역개발의 논리가 아니며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상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포츠에 있어서 녹색성장 정책이념은 스포츠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자연과 공생과 공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해악이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스포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생태학적 효율성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에 녹색이념을 주입시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기술적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통제 가능하고 피해복구의 비용도 사회적 하류계층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에서 회복 가능한 녹색 스포츠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에 있어서 녹색성장 정책이념은 스포츠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생태학적 한계 내에서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정의실현 문제, 그리고 스포츠 철학의 구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결국 스포츠가 생태학적으로 인간의 건전한 자유와 정의를 어떻게 신장시키고 개인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환경정책은 환경·사회·혁신정책의 적극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정책 수단은 새로운 부가가치 활동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혁신정책과 결합하고, 혁신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혁신을 통한 통합형 환경보호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성지은, 2009). 결국 종래의 스포츠 환경정책에 관한 근본 철학적 발상 자체를 전환하고 이를 국가정책으로 추동시키기 위한 전환기적 리더십, 그리고 스포츠 관련 단체의 유기적 동참의식과 범정부적 구조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환경과 인권을 결합한 스포츠 정책 구현

이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포츠에 있어서의 환경정책과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의를 근간으로 수립되어

져야 한다. 자연적으로 환경정의의 실현문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화 되어 나타날 수 있다. Hendricks(2012: 775)는 “환경정의는 외견상 다른 개념으로 보이는 환경법과 정책을 인권(civil rights) 운동과 결합시키고 있다. 환경정의 운동가들은 시설입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인권운동 전통에 기원하는 권리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이들에게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의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유사하게 된다. 그 결과 환경정의는 인권과 환경법의 교차점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책은 인권의 핵심가치를 실현한다는 맥락에서 모든 스포츠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 하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그 주변의 모든 거주민들도 무해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스포츠가 어떤 특정한 지역주민이나 계층에게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피해를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배려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즉 김홍균(2013)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지역 사회의 환경오염을 균등화하고, 그 결과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설과 신규시설의 재분배와 계층 간 오염부담의 재분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인권을 결합한 스포츠 정책은 오염지역에 대한 관리와 피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의 형평성 문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한다. 스포츠 정책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와 민주적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환경의 형평성 문제와 연루되며, 이는 지역주민의 참정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권의 위협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건강권을 인권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인정해 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인권의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과 미참여하는 인근지역 주민 모두는 환경폐해로부터 보호받아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은 평등권 외에도 건강권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책은 인권, 공정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발상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매우 초보적이고 미시적 수준이지만 이제부터는 환경적 형평성, 인권보장, 그리고 건강권을 다루는 환경정책에도 학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스포츠 환경 관련 입법으로서 입법부는 환경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부당하게 감내하는 환경부정의의 문제를 타개하는 스포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탈 권력화와 탈 구조화

일반적으로 사회 내에서 환경 부정의는 권력의 구조적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며 이 경우 환경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자아실현을 제약하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탈주체화와 소외 현상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환경 불평등은 권력의 불평등구조에 의해 강제되어 환경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기회를 억압하고 박탈하여 삶의 과정으로부터 탈주체화·소외를 촉진하게 되고 인간의 해체적 문제로 귀결된다(조명래, 2000).

그리하여 권력의 구조적 문제점은 환경문제, 특히 환경정의를 저해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스포츠에 있어서도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의한 환경부정의의 문제가 핵심쟁점이자 과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즉 스포츠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 권력에서 탈피하는 탈 권력화가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과제이다. 스포츠와 관련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권력의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사회계층 간 분배체계의 불공정 현상이 발생하고, 부당함과 강제가 일반화하기 때문에 권력의 전횡과 위압, 특혜로 인한 갈등구조 해결이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폐되고 왜곡된 사회정의를 부활시키는 것이 스포츠 참여와 관련한 환경정책 성공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현대에서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집단이나 관료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사회적 통제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상당수라 할 수 있다. 이는 통제를 즐기는 관료 세계와 돈벌이를 즐기는 자본가 세계 간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필연적 산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환경 위기, 생태위기는 환경론자가 신뢰하는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연에 대한 폭력의 결과라는 것이다(구승희, 1998). 따라서 스포츠에 있어서 국가 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탈 권력화가 환경정의 실현의 중요한 단서임이 틀림없다.

한편, 스포츠 참여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 정책은 언제나 유연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며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 참여 및 협력체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생태계는 늘 변화무쌍하며 각 지역별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조직에 의한 수직적 통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스포츠의 환경문제 해결에 결정적 장애요인은 환경정책의 경직성과 중앙집권식 통제방식, 그리고 획일적인 체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 환경행정의 관료적 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이상적인 정치평등과 환경정의를 위해서는 환경행정 체계의 탈 구조화가 시급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4. 지역주민의 절대적 이익 반영 정책

스포츠 시설을 조성할 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정에서 핵심 관건이 된다. 지역주민이 자신의 건강권, 생존권, 주체적 참정권 등을 보장받도록 배려하는 것 자체는 민주사회 지역주민의 주권 행사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김홍균(2013)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정의 운동가들의 주장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는 반대하는 한편, 그들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 역사와 권력의 중앙집권적 체제,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 등 비민주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많은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골프장 건설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시설 조성 계획에도 그것이 상수도를 오염시키고 산사태와 물 부족을 유발한다는 사회적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묵인하에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앙집권식 스포츠 환경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주도의 스포츠 개발이 지역주민의 자립도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지방자치성을 스포츠 환경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의식과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생태학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가운데 그것이 자연친화적인 문화적 유산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로 성장 발전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생태적, 역사적 의미를 갖춘다면 지역주민의 절대적 이익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

스포츠 개발을 둘러싼 이중적 시각에 입각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논리를 인정하고 그 논리를 기본전제로 스포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스포츠 개발이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자연스포츠 개발을 통하여 윤택한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스포츠활동을 둘러싼 지역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역개발을 위한 문화적 자원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정수호, 2001).

결국 스포츠에 있어서 생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지역주민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적 고유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주고 신장시켜 주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

V. 결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문제 중에는 인류의 생존권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이를 치유 내지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 사회정의의 실현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사회정의의 실현 문제는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환경정의의 실현 문제로 귀착된다. 환경정의는 미국에서 소수 인종과 빈곤한 지역 사회가 환경피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민운동에서 시작되어 국민을 위한 환경보호, 환경영역에서의 평등 보장, 환경영역에서의 국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스포츠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동시에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정의의 필연적 과정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려는 환경정의는 생물학적 평등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이른바 신 환경윤리 또는 환경철학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 윤리에는 정치적 엘리트와 경제적 엘리트에 의하여 와해되는 사회적 구조가 잔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정책의 문제점은 그간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과 고유성이 보존되지 못한 한계점을 들 수 있고, 스포츠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부재와 스포츠 환경정책에 생태학적 정책 패러다임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스포츠에 있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과제는 첫째, 녹색성장 정책이념의 구현. 둘째, 환경과 인권을 결합한 스포츠 정책 구현. 셋째,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탈 권력화와 탈 구조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절대적 이익 반영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구승희(1998). 생태 위기와 에코 아나키즘의 대안. **녹색 한국의 구상**. 서울: 숲과 나무.
- 김상현(1998). 세계화, 지방화 시대와 환경문제의 새로운 해법. **녹색 한국의 구상**. 서울: 숲과 나무.
- 김변웅, 오영석(1997). **환경 행정론**. 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김홍균(2013).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인권과 정의**, 431, 6-26.
- 박광국, 김정인(2020). 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28(3), 181-211.
- 박재목(2006).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환경사회학연구**, 10(2), 75-114.
- 성지은(2009). 환경친화적 혁신정책과 정책통합: 핀란드 사례. **환경정책 연구**, 8(2), 119-144.
- 이징연, 김동규(2009). 녹색성장과 스포츠 환경.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15-33.
- 이상운, 박지현(2018).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항목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 이상현(2001). **물 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정식(2000). **스포츠의 환경파괴구조와 환경친화적 정책과제 설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정식, 남중웅(2002). 스포츠의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윤리적 문제와 대처방안.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0(1), 151-174.

- 이학준(2002). 스포츠환경과 생태학적 윤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0(1), 175-184.
- 정수호(2001). 스포츠사회학: 레저 스포츠개발과 환경 -일본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체육학회지**, 40(4), 151-166.
- 정진영(2009). <포럼>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조건. 문화일보, 6월 17일자, 31면.
- 정홍익(1988). **현대 자본주의와 스포츠**. 서울: 나남.
- 조명래(2000). 환경정의의 재조명: 담론에서 실천으로. **환경과 생명**. 겨울호 서울: 환경과 생명사.
- 한상운(2009).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중심으로-. **환경포럼**, 12(2), 331-354.
- Bryant(1988).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Goldman, M. I. (1972). *The Spoils of Progress: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Universe Books.
- Hendricks Killcreas. A (2012). The Power of Community Action: Environmental Injustic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Mississippi. *81 Miss. L. J.* 769, 775-776.
- Milbrath, L. (1984). *Environmentalists: Vanguard for a New Socie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Naess, A. (1990).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Enquiry*. 16, 95-100.

* 논문접수일자 : 2021년 11월 09일

* 논문심사일자 : 2021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02일